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에 대해 생각하다

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한일 위안부 합의 직후, 저는 일본의 <아사히 신문>과 한국의 인터넷 매체인 <데일리한국>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양측에 제 생각을 표명할 기회를 얻었습니다¹.

이 인터뷰와 칼럼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합의의 의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때까지의 경위로 보아, 이를 외교 당국자들 간 교섭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그러한 평가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는 이 합의에 '아시아 여성기금이나 사사에안에 비해 진일보한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이며, 이것이 기본적으로 '일본이 군의 관여를 인정하고, 정부의 책임을 통감하며, 총리가 공식으로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으며, 일본 정부의 예산조치로 위안부 피해자 여성분들을 위한 사업이 실시된다는 합의'였기 때문이었습니다.(데일리한국)

그러나 합의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합의가 '할머니들과 한일 양국의 지원 단체가 요구해왔던 것에 비하면 모자란 것이고, 그러한 수준의 합의가 겨우 이제야 이루어졌냐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법적책임은 확인하지 못한 채 최종적 해결의 언질을 주'었으며, '일본정부가 소녀상을 문제시한 것은 유감'이라고 평가했습니다.(데일리한국, 아사히 신문)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이러한 비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과 지원 단체에 대한 성실한 설명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을 환기했습니다. (데일리한국)

또한, 이 합의의 배경에는 '역대 한국정부의 일관된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존재하며, 그러한 의미로 이번 합의는 '박근혜 정부의 단독 작품도 책임도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사히 신문, 데일리한국) 더욱 중요한 것은, '아시아여성기금 이후 이러한 발전이 원칙을 잃지 않고 인고의 세월을 견뎌오신 할머니들과 지원단체들, 그리고 연구자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일구어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며, '이 모든 것들은 민주화 이후 성장한 시민사회의 역량에 뒷받침된 것들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의 역량이 위안부 문제를 통해 분출했던 것은, 위안부 문제에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아픔의 역사가 집약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데일리한국)

더욱 아쉬운 것은 합의에 법적책임이라는 문구를 넣지 못했던 점입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지원단체로부터 '일본 정부가 구체적인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한다면 법적책임을 실질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의견이 표명된 경위도 있었기에, 종래 일본 정부가 고집해 온 도의적 책임이라는 말에서 도의적이라는 수식어를 제거함으로써 합의가 타결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데일리한국)

마지막에는 기대감을 드러내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 합의 내용을 착실히 시행해 감으로써 경색되어 있는 한일관계가 정상화하고,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통해 한일관계가 성숙한 관계에 진입하면, 새로운 분야에서 한일양국의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고 한일관계가 중층화·다면화될 것이며, '국교정상화 50 주년의 해를 동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의 공동체 구축을 위한 새로운 출발의 해로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담아 썼습니다.

이것이 이 합의를 접한 저의 감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를 둘러싼 그 후 한국의 상황은 굉장히 험난한 전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합의의 실시를 위한 재단을 설립한 최근 한국의 상황을 보아도, 무효화와 폐기를 주장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합의를 비판하시는 분들의 생각에 대하여, 그러한 생각이 충분히 성립될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특히, 합의의 문언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에서 행하는 비판의 경우, 그렇게 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이 합의 실시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¹ 「慰安婦問題日韓合意、識者に聞く」 [위안부 문제 한일합의, 지식인에게 묻다], 『아사히 신문』 2015년 12월 29일; 「위안부 합의의 성과와 과제」, 『데일리한국』 2015년 12월 29일.

그러나, '무효화·폐기'주장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거니와, 이 합의가 외상 합의(外相合意)라는 형식을 취한, 국가간의 약속에 의해 행해진 점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도 그러하므로 이를 가볍게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 개인의 지지 여하에 상관없이, 국민의 지지율 여하에 상관없이, 이 정부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화제 민주주의 정부이고, 따라서 그 합의는 나를 대표한 정부가 행한 것이므로, 이를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나를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판이 불가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또한 민주주의의 원칙에서 생각했을 때 비판도 가능합니다. 비판의 소리를 높여 '무효화·폐기'측으로 나아가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본 정부가 '무효화·폐기'에 동의할 때에 가능합니다. 여기서, 현 정세로부터 생각해볼 필요가 발생합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이 합의에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 그 일부에 '법적 책임'이 불명확하다고 하여 합의의 부족한 점을 중시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일본 정부가 너무 많은 부분을 양보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후자 쪽이 전자보다 많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지금 일본 정치 정세를 고려했을 때, '무효화·폐기'가 된 후, 이 문제에 '지금보다 나은' 해결책이 나오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패배주의와는 다릅니다. 굳이 말하자면, '베이스 캠프론'입니다. 정상에 오르기 전에 견실히 '베이스 캠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말합니다. 역으로 생각해보았을 때, '무효화·폐기'가 된 이후에 외교 당국자 간 합의로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채로 시간이 지나버릴 경우, 할머니들이 겪어오신 인내의 세월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금메달이 아니라든 이유로, 은메달, 또는 동메달, 혹은 동메달도 아닌 상처난 나무로 된 메달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던져버리는 바람에 성과로 남길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면, 지금까지 흘려왔던 땀은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옥쇄하여 명예를 지키는 것으로 과연 괜찮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가장 기뻐하는 건 어떤 사람일까요.

마지막으로, 위안부문제를 외교교섭의 문제로부터 사상의 문제로 바꾸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최근 자크 데리다의 『세기와 용서 (Le Siecle et le Pardon, 한국어판)』를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데리다의 '용서에 대한' 사상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데리다의 사상은 역설로 넘쳐있어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서술은 이 문제를 깊이 파고들어 생각하기 위한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서라는 개념은 '용서불가능한 것이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만 합니다. 사실상, 그것이야말로 용서해야 하는 유일한 것이 아닙니까? (중략) 만일 용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 가톨릭 교회가 경미한 죄라고 부르는 것만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있다면, 그럴 때에는 용서라는 관념 자체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용서해야 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종교적 언어로 사람들이 대죄라고 부르는 것, 최악의 것, 용서할 수 없는 범죄나 과오일 것입니다'라고 데리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대상에만 용서라는 개념이 성립한다는 역설은, 논리적으로 이해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실제로 이루어내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저의 이해부족일지도 모르겠지만, 데리다는 '용서의 불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용서라는 마음의 작용이 사상의 도약, 나아가서는 종교적 각성에도 닮은 무언가를 수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하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라는, 과거에 저지른 '휴머니즘에 반하는 범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써 '용서 불가능'한 상대가 되었습니다. 데리다의 사고에 따르자면, 여기에 와서 처음으로 '용서'의 개념이 성립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용서하는 것은 사상의 도약과 각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외상합의 이후를 살아가면서,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해결에 나서려하는 우리들에게 지금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번역 : 이선형(도쿄대학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박사과정, 한국학연구부문 RA)